

# 혼선 없게... '고3 유권자' 교육 준비 분주

광주·전남 1만1000여명 추산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도 가능  
시·도교육청 선거교육 지원 논의  
개학 한달 뒤 총선...시일 촉박  
'깜깜이 선거' 되지 않도록 만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 당국이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주권자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3월 개학 이후 불과 한달 뒤 선거가 치러지면서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학년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만 투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면학분위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1만 1000여명(광주 5000여명·전남 6000여명)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더하면 투표권을 갖는 지역 청소년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도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정치 활동 보장과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

으나,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크다. 당장 만 18세 학생들은 투표권을 갖게 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학칙에 따라 재학생의 정당·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의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아직 선거교육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못해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 당국은 오는 2월 학생의 정치활동 참여와 관련해 학교 규칙 제·개정을 안내하고, 선거교육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선거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월 중 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

어 각 학교에 안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학생이 고3 전체 학생의 20% 상단에 불과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준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4·15 총선까지 시일이 촉박해 주권자교육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정중제 부시장 시민에 사과하고 사임해야”

참여자치 21,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신속한 수사 촉구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불법당원 모집(광주일보 2020년 1월 6일자 6면)과 관련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21은 “정중제 행정부시장의 부도덕한 불법적인 관선선거 개입 의혹을 좌

시해선 안된다”며 “정 부시장은 자진 사임하고 민주당과 광주시는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단체는 “광주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이 광주시 공무원들의 4·15 총선 관련 불법 당원모집 개입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 부시

장의 강압에 못 이겨 당원을 모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 부시장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먼저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으로 스스로 사임하는 용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검찰은 불법당원 모집 의혹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도주한 편의점 강도 검거

광주광산경찰청은 8일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달아난 A(38)씨를 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경 광주시 광산구 신장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도주로를 파악한 뒤 이날 오후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군수 발언 유출했다며...공무원 낙도 발령 고흥군 보복성 인사 '논란'

신안 흥도 관리사무소로 발령  
포렌식 업체 불리 적법성 지적도

고흥군이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신안 섬 지역으로 파견해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고흥군 등에 따르면 6급 공무원 A씨는 7일자로 신안군 관할인 흥도 관리사무소로 발령 났다. 이 인사는 고흥군에서 신안군에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흥도 관리사무소 직원은 고흥군 봉래면으로 전보 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30일 고흥군청에서 열린 업무 간담회 당시 송구군 군수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송 구수는 레미콘 공장 설치 반대 등 집단 민원에 대해 실·과별 대응을 주문하며 “집단 민원에 동참한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가 있다, 없다가 알기보다는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집단시위가 그렇다”며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몇사람이 하나가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구수의 발언은 내부방송망을 통해 읍면사무소까지 중계됐다.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촛불시위를 격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 구수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만,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번 인사조치와 관련해 고흥군은 발원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군 예산을 써가며 외부에서 포렌식 업체까지 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고흥군은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한 사람을 찾겠다며 색출작업에 나서 녹음 파일에 모 면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며 면장을 비롯해 계장급 직원 4명을 조사했다. 군은 포렌식 업체에 예산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는 절대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서 “직관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인권도둑, 공갈 협박 등을 당해도 거대한 조직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고흥군은 이번 인사가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당시 군수의 발언이 유출돼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A씨가 휴대전화 검사를 거부해 유출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 징계를 하는 대신 내부 협의를 거쳐 신안군과 인사 교류를 하게 된 것일 뿐 보복성 인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유원지 시설 안전점검 8일 광주시 북구 생동동의 한 유원시설에서 북구청 관광육성팀 직원들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놀이기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어획량 허위보고 중국어선 서해어업관리단, 6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연초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해가 시작될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전에 우리나라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의 양을 조작해 허위보고 하는 등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이 적발됐다. 서해어업단은 “2020년 중국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가거도 및 흥도 서방해역 등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는 장소에 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한국바다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혐의다. 서해어업단은 지난 6일 중국 저인망 어선인 A호(219t)와 B호(219t)는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5일에도 중국저인망 어선인 C호(189t)와 D호(189t)를, 하루전인 4일에는 중국 저인망 어선인 E호(219t)와 F호(219t)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중국어선은 우리 수역에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역 밖에서 잡은 어획물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서해어업단은 중국어선들이 외측수역에서 잡은 양을 줄여서 우리나라에 보고한 후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로 이 양을 채우는 자정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총 6척 중 4척은 각 담보금 1억 6000만원씩 납부 후 석방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현재 “최저임금 인상, 위험 아니다”

“기업 재산권·경영자유 침해 안해”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기존 인상률이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

고 전제하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점,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동료 여경 성폭행 후 촬영 영상 유포한 순경 ‘철장형’

○...동료 여경을 성폭행 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이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절장형. ○...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A순경은 2018년 8월경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 주는 등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A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경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A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